美 국채 금리 5% 뚫었다… 대출·회사채까지 ‘고금리 압박’

美 10년물 19년 만에 최고 수준
고유가·물가압력에 긴축 경계 확산
日·유럽 장기채도 수십년래 최고
韓 장단기 국고채 가파른 오름세
기업 자금조달·차환 부담도 커져
가계 이자 늘고 증시엔 하락 압력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서는 등 국내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5%대를 찍고, 일본 국채 10년 금리도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도 국채 금리가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한국 역시 국고채 1년물부터 10년물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잇고 있다. 국가 부채가 불어나고 국제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더 올라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고채 금리가 뛰면 가계 대출 금리가 오르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주식시장에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삐 풀린 국채 금리

15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오전 5.041%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30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중 5.401%까지 치솟았다.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4.65%를 웃돌았다. 미 재무부가 15일 진행한 13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도 낙찰 금리는 연 5.420%로, 2020년 해당 만기 국채가 재도입된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금리 급등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그리고 채권 공급 과잉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8.75달러(15일)까지 치솟는 등 중동 분쟁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대비 3.4% 상승하며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구조적 수급 불균형도 한몫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고 재정적자를 메우려 대규모 국채를 찍어내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마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설비 투자를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국채 시장 규모는 2007년 약 4조5000억달러에서 현재 32조달러로 불어났다. 시장 유동성을 정부와 AI 기업이 동시에 흡수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보상)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올해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란 예측을 내놨던 스티븐 배로우 스탠다드은행 G10 전략 총괄은 블룸버그에 “우리는 ‘장기 고금리(higher-for-longer)’ 체제에 진입해 있다”고 진단했다. 자크 그리피스 크레디트사이츠 거시전략가는 “10년물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주요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9월 들어 연 3%를 넘어섰다.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다. 유럽 주요국 국채도 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리서치본부 전략총괄 이사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5% 초반을 추세적으로 돌파할 경우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기업 자금조달 부담 우려

한국 장기 국고채 금리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날 오후 마감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7bp 하락한 연 4.692%를 나타냈다. 50년 국고채도 연 4.634%에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4.547%로 5.3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7bp, 2.7bp 하락해 연 4.288%, 3.978%에 마감했다. 3년물 금리는 연 4.053%로 전 거래일 대비 3.8bp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서 대출 금리도 덩달아 뛰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회사채 발행 금리도 상승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iM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는 신용등급별로 AAA 4.49%, AA+ 4.59%, AA0 4.63%, AA- 4.69%, A+ 5.07%, A0 5.34%, A- 5.80%, BBB+ 8.06%로 집계됐다. 특히 AA-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A급 회사채는 3년물 금리가 일제히 5%를 웃돌고 있다.

재계와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1년 내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이어 SK(8조8688억원), 롯데(5조8510억원), 삼성(5조1000억원), LG(3조8650억원) 순으로 만기 도래분이 많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장기 투자 부담이 커졌고, 국내 주식시장 상승 폭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은 6대1 금리인상… 10월 추가인상은 ‘신중’

동결 의견도 성장·물가압력엔 공감
쟁점은 물가 상승세 지속 여부
9월 물가·가계부채가 핵심 변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8월 기준금리 인상 표결은 6대 1이었지만 정책 진단의 간극은 숫자 만큼 크지 않았다. 유일한 동결 의견도 강한 성장과 당장의 수요 측 물가압력을 인정했다. 다만 이를 기조적인 물가 상승으로 확신해 즉시 대응할지를 놓고 판단이 갈렸다.

인상 의견을 낸 위원 대부분이 다음 인상에는 조건을 붙였다는 점도 확인됐다. 6대 1은 8월 금리인상에 대한 강한 합의였지만 10월 추가 인상까지 예고한 표결은 아니었다.

◆ 성장·물가 진단 겹쳐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올렸다. 7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인상이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금리를 2.75%로 유지해야 한다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황 위원의 소수의견을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의 단순한 전술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8월 인상과 10월 인상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금통위는 조기 대응으로 정책 비용을 줄이는 쪽을 택했다는 것.

지난 15일 공개된 의사록은 이 같은 설명을 상당 부분 뒷받침했다. 황 위원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국내 성장률이 종전 전망과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내수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으로 당분간 높은 물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경기와 물가의 방향 자체를 다수 위원과 다르게 본 것은 아니었다.

판단이 갈린 지점은 물가압력의 지속성이었다. 인상 의견을 낸 위원들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3.3%, 2.9%로 잠재 수준을 웃돌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내년까지 2.5%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등으로 물가 상승이 확산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황 위원은 물가가 4분기부터 점차 둔화할 가능성과 원화의 상당 폭 절상을 주목했다. 높은 시장금리와 주가 조정으로 금융여건의 완화 정도가 줄었고, 주요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 실제 조정에는 신중하다는 점을 동결 근거로 제시했다.

인상파가 대응이 늦어져 물가와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위험을 더 크게 봤다면 황 위원은 물가의 지속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 인상할 때 발생할 비용에 무게를 둔 것이다.

황 위원은 “수요측 압력에 의한 물가 오름세가 기조적일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10월 인상 기정사실 아냐

의사록에 별도로 공개된 다섯 건의 인상 의견 가운데 네 건도 추가 인상을 자동 경로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인상이 물가·성장·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근원물가, 경기, 가계부채 상황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인상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됐다.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면서 긴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도 8월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있을 회의는 다 라이브”라며 두 차례 연속 인상이 경제주체에 미치는 여파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리 경로는 6대 1이라는 표결 숫자보다 새로 나오는 지표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3.4%로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전체 물가를 0.58%p 끌어 올린 만큼 해당 수치만으로 수요발 물가의 고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저효과가 정상화되는 9월 물가와 개인서비스 흐름, 두 차례 인상의 파급효과가 다음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은행의 이달 정책 결정과 원화 흐름도 황 위원이 제기한 ‘확인 필요성’을 검증할 변수다. 다음 금통위는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김주형 기자 gh47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 “한·중앙아, 전략적 관계로 진화해야”

李 대통령, 첫 중앙亞 다자 정상회의
5개국 정상 ‘서울선언’ 공동 채택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16일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은 ▲한-중앙아시아 간 파트너십의 제도화 ▲평화와 안정을 향한 동행 ▲혁신과 번영을 향한 미래 ▲사람과 신뢰를 통한 연결이라는 양 지역 간 4대 협력 비전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자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재로 개최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중앙아시아 협력은 개별 현안 대응을 넘어 중장기 미래과제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적 관계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협력 방향과 장기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공동의 이정표로 삼아 새로운 협력 과제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자”고 ‘서울선언’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정례화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 정세를 두고 ‘경제안보’ 대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90여년 전, 우리의 고려인 동포들은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며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시작했다”며 “오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교역과 투자, 산업과 인프라, 교육과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30여년 간 쌓아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이어 글로벌 안보·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뛰어난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한국과 풍부한 자원과 성장하는 시장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중앙아시아 각국이 추진 중인 제조업 확대 등 산업고도화 정책과 우리의 제조·기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